



## 대학 입시 사교육비 문제 : 현황과 대책

김 성 국 |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 I. 서론

우리나라 사교육비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에는 외국 사람들까지 이 문제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2003년 1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 아동권리 위원회에서 “한국 정부는 어린이를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에 대한 인식도 없다”고 평가를 내렸다고 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특히 한국의 입시교육과 조기교육이 아동권을 침해하는 환경으로 간주되어 깊은 우려가 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역대 정권은 사교육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다짐을 거듭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사교육 시장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왔다. 보완적인 교육을 시키겠다는 학부모와 배우겠다는 학생의 욕구를 정책이나 제도로 차단한다고 해서 사교육 시장을 잠재울 수는 없을 것이다. 사교육 시장을 흡수할 수 있는 대안적 시장이 존재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양질의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활용하느냐에 달

려 있다. 이는 OECD 국가에 있어 지식산업의 GDP 평균 기여율이 50% 이상인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20.5%, '99년 기준). 물적 자본과 노동의 축적을 통한 정부 주도의 발전 모형이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앞으로는 양질의 인적 자원이 지속적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전통적으로 교육중시문화를 가진 우리로서는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기인 지금이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하겠으며, 인적자원 외 부존자원이라고는 거의 없는 자원 빈국으로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김성국, 2002).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은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있으며, 고액 과외와 힘에 겨운 사교육비 지출이 서민 가계를 위협하고 있다.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잇달아 쉽게 출제되면서 재수생 강세 현상이 지속되자, 이미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들까지 재수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로 옮기기 위해 재수생 대열에 합류하는 현상까지 심화되고 있어 지금 학원가에는 ‘재수 열풍’이 불고 있다. 서울 강남 지역의 일부 명문 대입 학원들 앞에는 학원에 등록하려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장사진을 이루어 밤샘 대기하는 등 이 제는 사교육의 문제가 축소되기는커녕 대입 재수생 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우리나라 공교육의 어두운 그림 자라고 할 수 있는 과도한 사교육비, 특히 대학 입 시를 위한 사교육비 문제의 현황을 진단하고 경감 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는 데 있다.

## Ⅱ. 대학 입시 사교육비 문제의 현주소

우리나라 연간 사교육비의 규모는 조사 기관이 나 개인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연간 30조 원에서부터 많게는 55조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 학에 입학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국민들이 쏟아붓 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교육비는 실제로 가 계에 커다란 짐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를 일으 키고 있다. 자녀의 사교육비를 부담하기 위하여 부 모가 부업 전선에 뛰어드는 것은 기본이 되고 있으 며, 때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부업 행태로 인해 가정 파탄에까지 이르는 사례를 종종 목격한다. 한 해 교 육인적자원부 예산을 능가하는 규모가 사교육비로 쓰이는 것은, 일면 국민의 교육열을 반영하는 것으 로서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주장할지 모르나, 오로 지 대학 입학에 위한 목적으로 지출되는 과도한 사 교육비는 공교육을 황폐하게 만들고 교육 본연의 목적을 왜곡시키는 폐해를 낳고 있다.

2003년 입시를 기점으로 고교 졸업생 수가 대학 입학 정원에도 못 미치는 구조적 현상이 대두되면서, 일부 전문대학들과 지방 대학들은 법정 정원을 채우지 못해 학생 유치에 온 교직원들이 발벗고 나서 고 있지만 입시 시장에는 아직도 고액 과외가 넘쳐 나고, 사교육비로 연간 수십조 원의 돈이 지출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육

비는 많이 쓰는데 공교육은 공동화되다시피 하고, 실제 교육은 방과 후 주로 사교육기관에서 이루어 지는 현실은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 끼게 한다. 학교가 기초적인 학습능력과 창의력을 배양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도, 우선 대학에 들어 가야 하므로 학부모들도 울며 겨자먹기로 암기력과 주입식 위주의 과외공부에 자녀들을 내몰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교육의 '고비용 저효율'에 실망한 일 부 부모들은 자녀들을 외국으로 보내 양질의 교육 을 제공하려 하고 있다.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조기 교육과 교육 이민을 권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 는 것이다.

'고비용 저효율'이 우리나라 정치와 교육의 현주 소를 잘 말해 주고 있는 표현이다. 정치는 지난 대 통령 선거를 통해 '돈 안 드는 선거', '전자 민주주의' 등 바람직한 현상의 확산으로 어느 정도 개선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유독 교육만은 요지부동이다. 우리의 교육이 언제나 '고비용 저효율'의 멍에 를 벗게 될지 안타까울 뿐이다. 혹자는 사교육비 문 제는 결국 '학벌 없는 사회'가 정착되면 해결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 상주의에 가까운 이런 주장은 결국 사교육비 경감 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학벌 없는 사회가 어떤 사회를 의미하는지 정의 자체도 모호 할 뿐더러 당장 닦친 현실문제 해결에는 수수방관 하겠다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 명문 대학에 진학하 기 위해 열심히 과외를 받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에 게 학벌 없는 사회가 정착되면 과외를 안 해도 된다는 명제가 과연 가슴에 와 닿을 수 있겠는가? 서구 선진국은 학벌 없는 사회이므로 사교육비 수준이 낮은가? 오히려 이러한 허황된 주장 때문에 현실적 으로 시급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에 실기하기 쉽다. 문제는 사교육 시장의 수요를 감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우리 나라의 사교육비는 실제로 가계에 커다란 짐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한 해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을 능가하는 규모가 사교육비로 쓰이는 것은, 일면 국민의 교육열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주장할지 모르나, 오로지 대학 입학에 위한 목적으로 지출되는 과도한 사교육비는 공교육을 황폐하게 만들고 교육 본연의 목적을 왜곡시키는 폐해를 낳고 있다.

”

다음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사교육비 문제가 정치 논리에 휘말리는 일이다. 역대 정권은 사교육비 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서겠다는 공약을 수없이 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는커녕 악화된 경우가 많았다. 한때는 아예 과외 교습 자체가 불법화되기도 했고, 정권 초기에 대대적인 과외 단속으로 일부 학부모와 학원주가 구속된 사례도 있었지만 과외 교습은 음지에서 횡행하였으며 고액화, 지능화하여 문제를 일으켰다. 200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과외 교습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물 건너간 형국이 되었고,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과외 교습을 받는 학생들의 입장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제 과외는 더 이상 실력 없는 학생들이 실력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우등생이건 열등생이건 과외는 반드시 해야 되는 학생 문화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과외를 받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끼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한국교육개발원 김양분 연구위원이 전국 중·고교 학생 2,658명과 교사 1,770명을 대상으로 입시학원 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고생의 2명 중 1명은 혼자 공부하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는 '학원 중독'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매일 2003.1.11). '남들도 다 하는데 우리

만 안 하면 안 돼'라는 강박관념과 보상심리를 발동시키는 과정이 반복된다. 학원 중독을 경험한 학생들은 대학생이 되고 사회인이 되어도 주입식 교육의 '요점 정리'에 집착하여 창의적이고 독자적인 사고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사교육에 지출되는 비용도 문제지만 사교육을 통해 공교육이 망가지고 학생들의 학습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등 이래저래 사교육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된다.

### Ⅲ.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안

사교육비, 특히 대학 입시를 위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사교육비를 보는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사교육은 하나의 시장(market)이다. 이 시장은 이제 일부 세력이 독점, 과점을 하기가 어려운 연간 수십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이 시장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시장 논리대로 하여야 한다. 단속이나 일시적인 정치적 조치로는 통제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시장 논리대로 한다는 뜻은 사교육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형성하고 시장 참여 주체들끼리 경쟁하는 시장 원리가 적용됨으로써 사교육비 경감과 시장 축소를 위해 시장의 질서와 원리에 맞는 중

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글에서는 사교육 시장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교육 시장을 공교육 시장으로 가급적 흡수하고, 나름대로 국가 경제 측면에서 해를 끼치지 않는 건전한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 1. 대학 입시제도의 개선과 대학자율의 확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대책은 대학 입시제도의 개선에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과도한 사교육비를 투자하는 가장 큰 목적은 바라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지금까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대학 입시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수립·시행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학생 선발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성에 제동을 거는 일이 많았다. 물론 현 상황에서 대학 입시를 대학의 완전자율에 맡길 경우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입시에 있어서 선발 방법의 다양화와 함께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돌려주는 일이 선결되어야 한다. 대입 시장에서 주체인 대학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가격(price)에 학생들을 획득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비추어 당연한 것인데, 지금까지 정부가 나서서 관리가격(예컨대 수능시험, 학생부, 내신 등)을 강요하게 되어 수요와 공급의 자연스러운 조정이 왜곡되었고 이 와중에 불만을 느낀 주체(학생, 학부모)들의 사교육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른바 '이해찬 1세대'에 속하는 고교생들이 중학생 때부터 "공부를 못해도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구호에 현혹되어 일부 학생들

이 학업을 게을리한 결과 대학 입시에서 혹독한 결과를 맞았다.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 입학이 가능한지 여부는 장관이 말할 사안이라기보다는 개별 대학의 정책에 맡겨 두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 관리가격에서 인위적으로 수요, 공급이 만나도록 하기 보다는 적정가격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분위기를 마련하면 정부의 역할은 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은 어차피 우수 인재를 확보해야 학문적 재산이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존재이다. 바둑이나 노래만 잘하고 학과 성적은 형편없는 학생이 대거 몰려드는 것을 대학은 원치 않는다. 적정선에서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특기생 입학울 조정할 것이다. 최근 각 대학이 교장추천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당국의 입시 정책에 적극 부응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실제로 교장추천제로 입학한 학생들이 학업성취도나 학업태도면에서 매우 우수하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규제만 안 한다면 대학은 교장추천제를 꾸준히 확대할 것이다.

모 사립대학에서 수능 성적은 고려하지 않고 주로 영어 면접으로 국제학과 학생을 선발하기 시작하자 해외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한국어가 서툴러 국내 대학 응시를 망설이던 해외파 학생들이 대거 몰려들었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한 우수한 학생들은 입학 후 전공목을 영어로 수업을 들으면서 고국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필자는 이들을 인솔하여 해외 세미나에 다녀온 경험이 있는데, 국제학과 학생들은 탄탄한 영어 실력과 국제 감각으로 해외 현지 학생들과 겨루어 전혀 부족하지 않은 우수한 실력을 발휘하여 국가와 대학의 명예를 드높였다. 아마도 교육인적자원부가 입시에서 수능 성적 요구를 강제하였다면 이들은 영원히 고국에 발붙이지 못하고 아직도 세계 어딘가를 떠돌고 있을 것이다. 위는 입시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이는

“

초기 단계에 시행상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대학의 학생 선발권, 학생의 대학 선발권을 확대하는 것이  
교육의 정도일 뿐더러 이 길이 과도한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초기 단계에 시행상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대학의 학생 선발권, 학생의 대학 선발권을 확대하는 것이 교육의 정도일 뿐더러 이 길이 과도한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대학이 다양한 선발 프로그램을 정하고 시행하게 되면 학생들은 중학생 시절부터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이나 학과를 정해서 그 대학의 입시요강에 따라 꾸준히 실력을 연마하는 바람직한 현상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학원이나 과외 교사들은 주로 국·영·수 위주의 학과를 가르치기 때문에 대학 입시요강이 이러한 특정 학과와 무관할수록 과외 교습의 필요성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 2. 고교 학력평가 제도의 개선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고교에서 시행하는 학력평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고교교육은 대학에 가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수행평가, 특기·적성 교육도 결국 대학 입시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왜곡되고 좌절되는 것이 오늘날 고교교육의 현상이다. 따라서 고교의 학력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장 추천 전형을 확대하는 것이 사교육비 감

축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지만, 학교장 추천이 국·영·수 같은 교과 성적 우수자에 집중되는 현상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학교장 추천을 받으려면 교과 성적도 중요하지만, 학교장이 미리 제시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위해서는 사교육비가 들 필요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 이종재 원장이 최근 제안한 '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나 '과제 수행 성과 인증제'의 도입 방안은 고려해 볼 만한 좋은 제안으로 여겨진다. 다만 이러한 인증제가 사교육 수요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하고, 또 이러한 인증을 대학이 대입 전형에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감한 예산 지원을 통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고 이를 토대로 교과목과 교과 분야의 축소, 예·체능 과목의 평가체계 개선, 참고서가 필요 없는 충실한 교과서 편찬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검토할 만한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 3. IT 기술을 활용한 학습정보의 확충

인터넷과 같은 정보기술(IT)이 확산되면서 교육이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을 벗어나 사이버 공간에서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것도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일조할 수 있다. 교육방송과 인터넷

학습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사이버 공교육'을 활성화하면 개인 교습을 통한 사교육비 증가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일부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e-Learning 기법(원격학습, On-demand 학습 등)을 적극 활용하여 개인의 학습성취도에 맞는 '맞춤 원격교육'이 가능하게 되고, 학습의 질이 높아진다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고액 과외 시장을 떠나 사이버 공교육 공간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다. 일선 학교에서도 '사이버 공교육'을 학과 운영에 연계한다면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학습지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온라인 학습지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서 잘 이용하기만 하면 비싼 과외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다양한 학습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속과 학부모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 '사이버 사교육'도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으므로 고액 과외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과도한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4. 자율학교의 확충과 지원

최근 고학력 실업자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각광을 받는 학교가 자율학교들이다. 서울 근교의 모 조리고(주방장 양성 고교) 입시에 우수 학생들이 대거 몰리는가 하면, 졸업과 동시에 고수입 직업이 보장되는 실속 있는 자율고교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직업학교가 그 나름대로 제 기능을 하고 있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학벌 중시 풍조 때문에 직업학교들이 명맥을 유지하기가 어려웠고 문제아들이 다니는 곳으로 치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면서 명실

상부 장래 직업을 연마하는 교육기관으로 거듭 태어나고 있다. 사회의 분화와 발전에 따라 이러한 직업학교가 더 늘어나야 하고, 이들이 우수한 시설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를 교사로 초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일부 실업고나 대안학교들도 요건을 갖추면 자율 직업학교로 육성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말씀 많은 자립형 사립고교도 과도한 사교육비 경감과 고교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건을 갖춘 일부 사립고교들을 자율화하면 심각한 과외 문제도 없으면서 건학이념과 학부모의 기호에 맞는 교육을 철저히 할 수 있다.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교육 기회 균등을 문제삼아 자립형 사립고교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사교육 시장의 근본적 감축을 위해서는 시장의 공급 사이드에서의 대책이 긴요하다고 볼 때, 연간 수십조에 이르는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국가적 폐단을 시정하고 고교교육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엄격한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자립형 사립학교의 도입은 국제적 관례를 감안하더라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 5. 국가 인적자원정책과의 연계

'국민의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결실로 인적자원개발 기본 계획이 마련되고 제도의 확충이 이루어졌다. 인적자원 개발기본계획은 '경쟁력 있는 국민, 서로 신뢰하는 사회'를 정책 비전으로 하여 '국민 개개인의 역량 강화', '사회적 신뢰 구축과 결속의 강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통하여 2005년까지 인적자원분야 국가경쟁력 10위권의 진출을 목표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회의는 나름대로 이슈를 많이 발굴했고, 이를

“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감한 예산 지원을 통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고  
이를 토대로 교과목과 교과 분야의 축소, 예·체능 과목의  
평가체계 개선, 참고서가 필요 없는 충실한 교과서 편찬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검토할 만한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

통해 교육계와 비교육계간의 진지한 논의의 장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바람직한 성과이다(김성국, 2002). 사교육비 문제도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범부처적, 체계적으로 논의되고 대책이 마련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사교육비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만의 문제가 아닌 범부처적 사안이기 때문이다.

2002년 8월 26일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제정·공포되었고, 이제 새 정부에서 동법이 시행되면 인적자원 정책의 조정·평가기능이 확대·강화될 것이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과 시행령의 제정 공포로 국가인적자원개발(national human resource management) 정책의 평가와 투자분석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며, 인적자원개발회의 등을 통한 인적자원정책의 효율적 총괄·조정을 위한 회의체제 구축으로 부처간 조정이 종전보다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과의 열풍과 대입을 위한 사교육비 지출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화되어 국가의 미래 전략적 인재 확보와 육성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준다.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육성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영재 교육, 이공계 인력 양성, 국가 전략 인재 양성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사교육비 경감 이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 IV. 맺음말

최근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차별화되는 시장, 대중화되는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1년 말까지의 소득 상위 20% 이내 고소득층과 하위 20% 이내 저소득층간의 과외·학원비 지출 격차는 4.6배로 조사됐다. 즉, 저소득층이 1백만 원을 쓸 때 고소득층은 4백60만 원을 썼다는 얘기다. 이는 '91~'97년의 3.9배에 비해 크게 확대된 것이다(한국경제, 2002. 7. 3). 이제 우리나라의 사교육비는 공교육을 공동화시키는 것은 물론, 소득계층간 격차를 확대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현상이 나타나 우려된다.

사교육 시장이 커지게 된 데는 우리 사회가 교육의 선발, 인증 기능만을 강조하고 교육을 통한 개발 기능을 등한시한 결과로 사료된다(김성국, 2001; 2003). 최근 전경련이 회원사 인사 담당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졸 신입 사원들의 지식 및 기술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26점에 불과했다. 10점 이하라는 평가도 25%에

달했다(매일경제, 2003.2.9). 또한 최근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인력 채용에 있어서 경력사원 채용 규모가 3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경력사원 채용이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대학을 갓 졸업한 인력에 대한 신뢰가 감소하고 있다는 방증이 된다. 고교나 재수 시절에 그렇게 사교육비를 많이 들여 들어간 대학교육의 질이 나날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의 위기를 말해 주고 있다.

단순히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출할 때 기업이 인정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컴피턴시(competency)'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고교생이나 학부모들이 인식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컴피턴시 획득을 위해서는 대입학원이나 과외 선생에게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공교육과 자기개발을 통한 실력 연마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립될 때 우리나라의 사교육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성국(2001). "인적자원의 미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개원기념 논문집』.
- 김성국(2002). "인적자원개발정책에 대한 평가". 『교육개혁 평가』.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 김성국(2003). 『인적자원관리 뉴패러다임』. 명경사.
- Hänggi, G.(2001). *Macht der Kompetenz*. 3. Aufl., Frechen: Datakontext.

#### 김성국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독일 Mannheim 대학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교협 연구개발부장, 대통령자문 사교육공동체위원회 전문위원, 한국인사관리학회 부회장, 미국 U.C.Berkeley 대학 및 독일 Paderborn, Halle 대학 객원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리더십학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 논저로는 『경영과 사회』, 『21세기 인적자원관리』(공저), 『조직학의 주요이론』(공저), 『인적자원관리 뉴패러다임』 외 다수가 있다.